
초기기업(Seed)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핸드북]



안 내

1. 본 핸드북은 『초기기업(Seed)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기초로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 본 핸드북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 종사자들에게 참고자료로서의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 핸드북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복사, 공개 또는 유포가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상호의 이해와 신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당사는 본 핸드북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귀하 또는 귀사가 본 핸드북에 포함된 정보, 의견 및 추가적인 질의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본 해설서의 기재 내용은 2018년 8월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지침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법령의 제개정,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차

I. 기업의 자금조달과 초기 벤처기업 투자계약서	1
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와 투자계약서의 유형	2
2. 투자계약서의 종류	3
3. 투자계약서의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책임	4
4. 자금조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5
II. Seed 단계의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5
1. 일반론	5
2. 구성내용	5
(1) 제목	6
(2) 전문/종결문, 계약체결일자	6
(3) 당사자	7
(4) 이해관계인	7
(5) 계약목적	7
(6) 신주의 발행과 인수	7
(7)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	8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9
2) 우선권에 관한 사항(이익배당우선권,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 ...	10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11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2
(8) 투자의 선행조건	13
(9) 회사의 진술과 보장	14
(10) 거래의 완결	16
(11)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17

(12)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18
(13) 투자자의 동의권	18
(14) 보고 및 자료제출	19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0
(16) 회계 및 업무감사	21
(17) 계약의 효력 및 내용변경	21
(18)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22
(19) 이해관계인의 책임	22
(20) 주주간 합의	23
1)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23
2)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right)	24
3) 주식매수청구권	27

III. 사례해설29

첨부자료: 1. 일반적 투자계약서와 Seed 투자계약서 비교표

2. Seed 투자계약서 단계별 권고안

가. 비교표

나. 활용방안

3. 권고안 Sample

가.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Seed)

나. 보통주 투자계약서(S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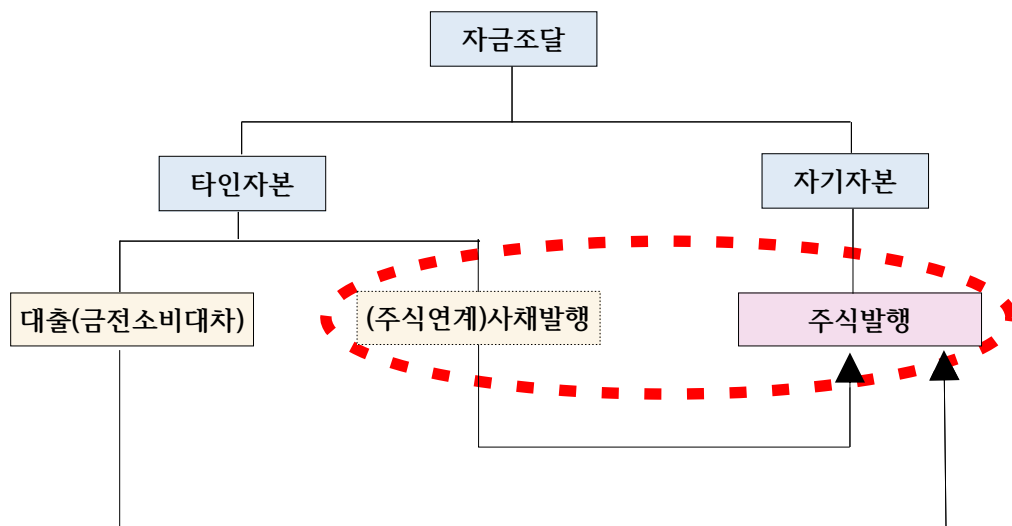
4. 법률용어의 해설

I. 기업의 자금조달과 초기 벤처기업 투자계약서

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와 투자계약서의 유형

- 기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i) 자신의 가치를 나누어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주식으로 변환될 권리를 포함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사채 발행) 자금을 조달함
- 대출은 투자로 보지는 않음

【기업의 자금조달】(그림1)



【투자자의 주주의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표1)

구분	(주식연계형)사채	주식(보통주주)
지위(권리)	채권자	주주
이자	○	×
원금상환	○	×
회사 경영참여 (의결권)	×	○
주식전환가능성 (리픽싱; Refixing ¹⁾)	○	-

2. 투자계약서의 종류

【벤처캐피탈 투자의 유형】(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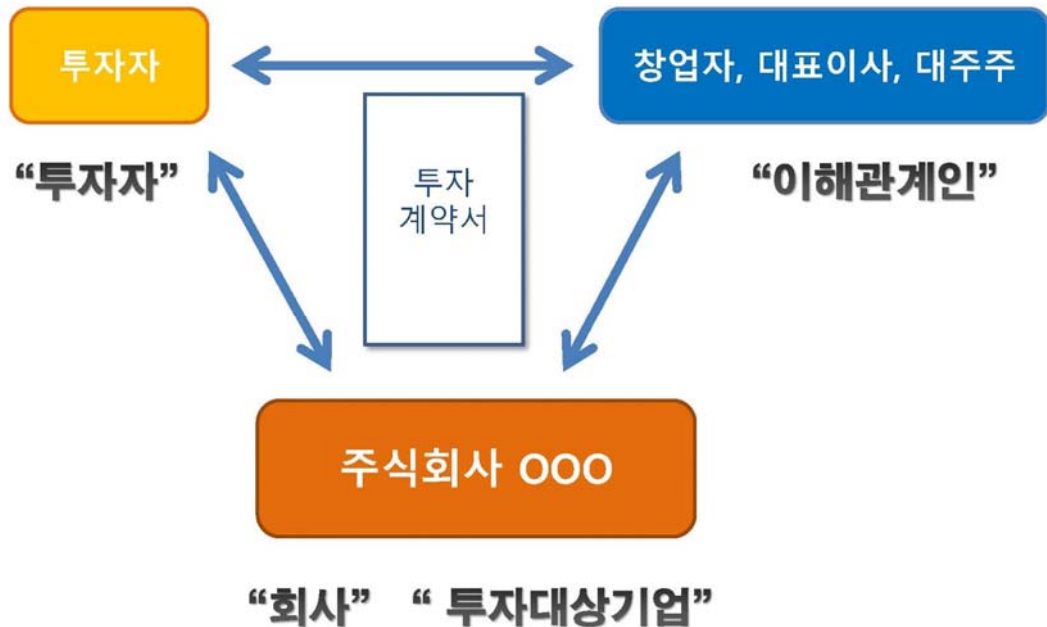
채권적 투자	자본적 투자
<u>전환사채(CB)</u>	<u>보통주</u>
<u>신주인수권부사채(BW)</u>	<u>상환전환우선주(RCPS)</u>
프로젝트투자	기타 다양한 종류주식
교환사채(EB)	
(새로운 유형)SAFE, CN 등	

- 한편 보통주에 몇 가지 특별한 권리(이익배당우선권, 잔여재산분배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등)를 부여한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며 이를 총칭하여 종류주식이라고 함
- 이 중 전환권과 우선권(이익배당우선권 + 잔여재산분배우선권)을 포함한 전환우선주(CPS)와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삭제하여 일반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안 2가지 검토

1) 리픽싱(Refixing)이란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인 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 주식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계약서의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책임

【투자계약서의 구조】(그림2)



- 투자계약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투자자와 회사의 약속 및 회사의 통상 최대주주인 이해관계인의 투자자에 대한 약속을 기재한 문서
- 한편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²⁾는 삭제 권고 / 권고안³⁾ 참조
- 한편 후술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포함된 계약(별지2가 추가된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유를 축소하여야 함(후술)

2) 예시: 제[*]조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및 본 계약상 의무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함)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권고안: 제[*]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자금조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이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i) 『자금조달로 인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참고자료 [35]페이지 비교표 참조

(ii) 『자금조달 이후 이해관계인의 지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사례 [29]페이지 사례 참조

(iii) 『자금조달 관련 계약으로 인하여 후속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

: 사례 [29]페이지 사례 참조

- 후술하는 개별 항목에서 위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아야 함

II. Seed 단계의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1. 일반론

- 권고안은 (보통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주식인수계약서(SPA)에 아주 최소한도의 회사의 의무와 이해관계인의 책임조항(SHA)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형태

2. 구성내용

위 권고안에 따라 기본형 (전환우선주)투자계약서의 조항 체계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 제1조 (신주의 발행사항)
- 제2조 (본건 주식의 내용)
- 제3조 (투자의 선행조건)
- 제4조 (진술과 보장)
- 제5조 (거래의 완결)
-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경영 및 퇴사 등 제한)
- 제8조 (투자자의 동의권)
- 제9조 (보고 및 자료제출)
-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11조 (회계 및 업무감사)
- 제12조 (계약의 효력 및 내용변경)
-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 제15조 (주주간 합의)

별지1 본건 주식(우선주)의 내용 / (보통주식의 경우) 생략

제1조 (의결권)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제3조 (청산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제5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별지2 주주간 합의사항

제1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2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제4조 (주식매수청구권)

- (1) 제1조 내지 제5조(제2조와 별지1을 포함한다)와 제12조 및 제13조를 결합한 형태, (2) 제1조 내지 14조(제2조와 별지1을 포함한다)를 결합한 형태, (3) 제1조 내지 제15조(제2조와 별지1, 제15조와 별지2를 포함한다)를 결합한 형태 등이 가능
- 경우에 따라서는 제6조 내지 제11조 중 특정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 가능
- 또한 별지1과 별지2의 내용을 가감하여 사용 가능
- 별지2.의 이해관계인의 책임조항(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사용 가능
- 첨부자료 『2. Seed 투자계약서 단계별 권고안』 비교표 및 활용방안 참조

(1) 제목

- 계약서임을 나타내는 제목(Title)

(2) 전문/종결문, 계약체결일자

- 전문(前文, Recitals)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기에 앞서 그 계약의 당사자⁴⁾, 배경⁵⁾이나 체결일자⁶⁾, 취지나 적법한 합의의 선언 등을 기재하는

4)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주소,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등을 명기하여 주체를 분명히 하기도 한다.

문언

(3) 당사자

-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인 당사자 표시

(4) 이해관계인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을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
- 이해관계인의 당사자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대보증책임의 부담 여부. 초기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아래 예시조항에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과 같은 형태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를 투자계약서 반영에 있어서 배제하여야 함

(5) 계약목적

- 투자계약서 작성의 목적이 ‘당사자 간 투자 및 관련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

(6) 신주의 발행과 인수

【예시】

-
- 5) 전문에는 계약체결의 취지/배경을 간단히 기재하기도 하는바,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를 받기를 원하며 투자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간략히 기재한다.
- 6) 계약체결일자는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이를 명백히 하는 의미가 있다. 날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조 (신주의 발행 사항)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이하 투자자가 인수하는 종류주식을 “본건 주식”이라고 함).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 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 주, 종류주식 [] 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종류주식 [] 주
 -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 원
 - 다.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 원
 - 라.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 원
 - 마.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 []년 []월 []일
 - 바. 본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 계좌번호 []

- 신주의 발행과 인수의 조에서는 신주의 종류, 신주의 수, 기 발행주식의 수, 1주의 금액, 본건 발행에 따른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총 인수대금, 납입기일 등을 정함
- 『투자금 납입 전 회사 가치』(Pre-money valuation)를 정하고 『투자금액』을 기재한 후 『투자금 납입 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⁷⁾』를 산정하여 『투자금 납입 전 회사 가치/투자금 납입 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1주당 가격』을 기재하기도 하며, 『투자금액/1주당 가격』로 투자자에 대한 발행주식 수를 산정하여 기재하기도 함

(7) 본건 (종류)주식[(전환)우선주]의 내용

-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종류주식 투자는 전환우선주를 기본 권고안하며, 상환권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7) 기 발행된 주식에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환권을 포함한 지분 등을 통하여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합산하기도 한다. 투자 시점에 1주당 가격을 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의 주요부분으로서,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②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③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④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 본 계약서 본문에서는 본건 주식의 내용을 『별지1. 본건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하여 별지로 구성을 하며, 이 별지1.을 삭제할 경우에는 보통주인수계약서가 될 것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예시】

제[*]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⁸⁾은 발행일⁹⁾로부터 [*]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의결권 조항은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종류주식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익배당 우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는 만큼 의결권의 배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의 특징을 고려할 때 양보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만일 경영권 관련하여 이사 선임 등에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면 이사 선임에 대한 제한을 하는 형태의 의결권 제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기는 하나, 추후 IPO 등을 고려할 때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8) 존속기간은 5, 7, 10년 단위 통례. 존속기간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존속기간은 통상 10년으로 기재한다.

9) 발행일 기준으로 표현을 변경한 것이나,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정관과 일치시켜야 한다.

2) 우선권에 관한 사항(이익배당우선권,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

【예시】

제[*]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참가적¹⁰⁾, 누적적¹¹⁾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¹²⁾ 기준 연 []%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는다.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은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이 경우 동 항목을 삭제하거나 배당률은 [0]%로 할 수 있음
- 이익배당우선권 조항은 이익배당을 투자자가 보통주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먼저(先) 받고 또한 ‘참가적’ 우선주로 발행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배당을 받는 만큼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조항

【예시】

제[*]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¹³⁾ 및 이에 대하여 연 []%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10) ‘참가적’은 투자자인 우선주주가 우선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배당가능이익이 더 있는 경우에 보통주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11) ‘누적적’은 전 배당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이익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누적하여 배당하여야 할 의무를 부가하는 조항이다. 단 어느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범위 내이어야 한다.

12)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발행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이익배당 범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를 정하여야 한다.

- 위 예시조항은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조항만을 기재한 것
- 이에 대하여 준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조항(Deemed Liquidation Preference)[그 사유로 언급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살펴보면, 정관에 정한 사유로서 (i)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 (ii)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 본 계약서 권고안에서는 준청산(Deemed Liquidation)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기 벤처기업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 권고안에서는 삭제할 하였으나, 초기 벤처기업 입장에서 동 조항이 경우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음은 인지를 하여야 함

3) 전환권에 관한 사항

【예시】

제[*]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¹⁴⁾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¹⁵⁾
 1.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

13) 기준을 액면가로도 할 수 있으나, 투자자는 청산시점의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통상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 조항은 청산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될 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투자자나 기업 양자에게 아주 민감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그 비율에 따라 무상지급을 받는다.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권의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음
- 전환사유증 제1호는 원칙적인 전환비율(전환가격)을 의미하고, 제2호 이하에서는 전환비율(전환가격)의 조정 규정(이하 “리픽싱(Refixing)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투자 이후 신주발행, 주식분할, 주식배당 등 투자 당시의 기대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보통주로 전환하는 비율 내지 전환가격을 조정해주는 취지로서, 이를 희석화 방지 규정(Anti-dilution Clause)이라고도 함
- 매출 등 경영실적이나 IPO 공모단가 리픽싱(Refixing)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아 삭제 권고
- 한편, 전환권과 관련하여 개정상법은 전환권을 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보유할 수도 있는 이원적 체계로 규율하는 것을 명확히 함.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기업에게 전환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며, 이는 양보받기 어려운 부분임
- 본 해설서 권고안에서는 지분희석방지요항만을 예시하였으며, 매출연동 또는 IPO 공모단가 연동 리픽싱(Refixing) 규정 등은 반영하지 않음

14) 위 기간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기업의 정관의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상환권도 동일하다.

15)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전환권 조항은 기업에게는 경우에 따라 불리한 조항이다. 전환권 조항은 리픽싱(Refixing)을 통하여 투자자의 지분희석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불공정 계약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도 기업도 리픽싱(Refixing)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할 것이다) 개별 리픽싱(Refixing) 조항의 불공정성을 살펴야 한다. 또한 전환권, 후술하는 상환권의 보유 주체를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펀드의 회수 관리 등 현실을 고려하면 수용이 불가능한 조항일 것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환권 조항은 개별 전환권 조항의 불공정성으로 접근을 하여야 하며,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i) 매출 등 연동 전환가격 조정 조항이 과도한 경우, (ii) IPO 공모단가 조정이 과도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예시】

제[*]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들에게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위 규정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취지로 이해

(8) 투자의 선행조건

【예시】

제[*]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의무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4.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7.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경영상태 또는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이 없을 것

- 선행조건은 투자계약 체결일과 투자금 납입일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것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선행조건은 그 범위가 좁을수록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할 것
- 다만 위 예시된 선행조건 사항은 일반적 사항으로서 통상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예시 조항이며, 이 외에 기타 선행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9) 회사의 진술과 보장

【예시】

제*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까지 아래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회사의 본 계약의 체결일 및 납입기일 기준 회사의 지분증권(발행주식 현황, 주식연계사채 발행 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및 기타 회사의 지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 현황은 [부록1. 지분증권 현황]과 같다. 회사의 발행주식 등 지분증권은 적법하게 납입되었으며 가장납입된 사실이 없다.
2.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년 []월 []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3.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다.
4. 회사는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 투자를 받는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과 상황, 법적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투자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위에서는 초기 벤처기업 입장에서 최소한도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예시하였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이 보다 많은 조항을 요구
-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진술과 보장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통상적으로 투자 업계에서 정형화된 수준의 진술과 보장이 사용. 다만 진술과 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며,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진술과 보장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의무부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러한 조항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
- 한편 기업은 진술과 보장이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됨. 만일 명백하게 진술과 보장에 어긋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예외사항으로 명시를 하여야 함

- 또한 투자자에게 실사 과정에서 또는 구두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예외에 해당함을 고지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례는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진술과 보장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10) 거래의 완결

【예시】

제[*]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또는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납입계좌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¹⁶⁾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¹⁷⁾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¹⁸⁾¹⁹⁾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16)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하여,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주주의 지위가 발생함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일이라 함은, 주주로서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날)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통상 벤처캐피탈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를 보면 발행일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계약서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계약서도 있다.

거래의 완결(이른바 “Closing”)은 주금 납입을 완료한 날을 의미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법률적 효과가 좌우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주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발행일’이라고도 한다)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초기 벤처기업은 주권을 통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를 기재하고 등기는 기업의 의무인바, 이를 적시에 등기토록 하여야 한다.

(11)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예시】

제[*]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 투자자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 투자계약 체결시 정했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금 용도 실사를 진행함
- 한편 제3자에 대한 대여나 주식매입 금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음
-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제1항만으로 충분하나 펀드의 경우 그 내부 지침에 따라

17) 상업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실무적으로 1주일은 소요된다.

18) 기타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회계 관련 자료 등을 기재하기도 한다. 첨부서류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여 교부받기도 한다.

19) 이해관계인, 대표이사 신용조회동의서를 미리 받기도 하며, 미리 양식을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제2항과 같은 조항이 반영되어야 할 수 있음. 다만 본 계약서 권고안의 경우 일반조항으로 회계 및 업무 감사 조항을 두고 있음. 어느 경우에도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삭제 가능

(12)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 제한

【예시】

제[*]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년간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년간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퇴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벤처투자는 인력을 보고 하는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투자자는 위와 같은 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
- 이해관계인의 의무 기간은 통상 1~2년을 기재
- 투자계약서 첨부서류로 “퇴직제한 및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와 충돌없이 기간 기재(첨부 약정서는 투자자가 선택적으로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는 것에 주의

(13) 투자자의 동의권

【예시】

제[*]조 투자자의 동의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1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건 주식의 발행가격 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 및/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회사의 주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지적재산권 등)의 처분행위
5. 기타 회사의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투자업계에서는 통상 동의권과 함께 협의권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본 권고안에서는 협의권은 삭제
- 동의권의 범위도 일반 벤처투자계약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소화
- 동의권 조항은 사전 서면 동의를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위반사유가 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서에 명기한 권리의 행사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실무에서 투자대상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서를 위반하여 소송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의 상당 부분이 본 동의권 규정 위반 사안이라는 점을 주의

(14) 보고 및 자료제출

【예시】

제[*]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상황 및/또는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사십오(45)일 이내
2. 반기보고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3. 분기보고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

- 보고의무 조항은 초기 벤처기업에게는 부담이 됨
- 본 조에서는 구체적 나열을 지양하고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한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음
-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의무임에는 분명한바,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고 축소 협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바람직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예시】

제[*]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거래완결 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위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실무에서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 본 계약서 권고안에서는 거래완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0% 산정을 하였으나 협의에 따라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16) 회계 및 업무감사

【예시】

제[*]조 (회계 및 업무감사)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업무감사 관련한 의무조항은 경우에 따라 협의가 가능
- 다만 통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투자자가 편드인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7) 계약의 효력 및 내용변경

【예시】

제[*]조 (본 계약의 효력 및 내용변경)

- ①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투자계약서의 필수 규정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기재되기도 하는 조항

(18)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예시】

제[*]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 관할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투자자인 창투사의 소재지 관할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관할 규정을 두고 있음
- 준거법에 대한 규정을 두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국적의 법적 주체 사이의 약정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기능

(19) 이해관계인의 책임

【예시】

제[*]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행한 진술과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무가 지양되어야 함은 전술한 것과 같음
- 본 조는 회사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와 『진술과

보장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

- 통상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²⁰⁾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의 위반 사실과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 주주간 합의

【예시】

제[*]조 (주주간 합의)

투자자와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2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회사와 투자자의 주식인수계약서 및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본문으로 약정이 다 종결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벤처투자계약서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과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별지2. 주주간 합의서』는 주식의 처분에 관한 약정 중 일부 사항과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
- 다만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별지2. 주주간 합의서』를 생략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1)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예시】

20) 이 경우 위반사유의 발생만으로 일단 이해관계인은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제[*]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제한 조항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상 쉽게 양보하지 않는 조항
-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동 취지의 조항은 삭제

2)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예시】

제* 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 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 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일십[1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십[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간은 10일로 예시하였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10일의 기간은 조정 가능
- 전술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사항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요청하기도 함

【예시】

제[*]조의2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 ① 투자자가 제3자로부터 현재 회사의 본질가치의 [*]%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M&A를 위한 매수제안을 받은 경우 투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처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최대한 협의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를 가진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포괄하여 “매수희망자”라 한다)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 외에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면으로써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매수희망자”가 양수할 의사를 가진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매수희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다. 투자자가 위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그 주식의 전부를 그 조건에 따라 매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매도하기로 한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그 매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선택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상기 매매관계를 해지하고 “매수 희망자”와의 매수거래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매수 통지 기한 종료일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매수희망자와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종류와 수량, 당시 확정된 매도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회사로부터 위 통지를 받으면 동반매도요구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인은 1항의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 또는 당 매수거래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자자가 본 조에 정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어느 이해관계인이 본 조에 정한 의무 기타 조건에 위반함으로써 투자자가 “매수희망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투자자를 면책시키고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및 배상은 투자자가 가지는 본 계약상의 매수청구권 기타 다른 구제조치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해관계인도 투자자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이해관계인이 거래하려고 하는 매수의향자에게 투자자 역시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 요청하는 권리
- 실무에서는 ‘함께 덧붙여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Tag along

right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투자자의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 기재되고 있으며 투자자의 양보가 거의 불가능한 조항임

3) 주식매수청구권

【예시】

제[*]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완결에 이르게 한 경우
2. 제*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3.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해관계인이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별지2 주주간 합의서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③ 본조의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본 계약서 권고안에서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권고하지 않음.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는 유지

-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책임을 지양하는 입장에 부합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조항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검토 조항 중 하나이며, 기업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 축소 운영하는 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이해관계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는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반드시 중요하게 협의하여야 할 대상 중 하나라 할 것임

III. 사례해설

사례해설에 앞서 기업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i)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ii) 법인인감을 신중하게 날인하여야 한다는 점 2가지라 할 것이다. 후술하는 사례는 개별 사례에 앞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 본다.

[사례]

A 업체(최대주주 甲)는 부품 수출업체로서 2000년 후반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 가입된 외환파생상품(KIKO)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기업은 단기적인 현금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업계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였다. 한편 투자자는 당시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투자를 하였으며, 기업성과에 연동하여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한편 몇 년 후 A 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은 가능하였으나, 투자계약에 따른 리픽싱(Refixing)을 적용할 경우 A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존 甲에서 투자자로 변경되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는 A기업과 甲에게 해당 주식을 투자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가격 협의가 결렬되어 투자자는 투자계약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영진을 변경하고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은 본 투자계약서의 불공정성 등을 법률적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동 투자계약서는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검토의 필요성]

사례1에서 A 업체는 외환파생상품(KIKO) 계약을 동 계약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외환파생상품(KIKO)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라고는 하나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위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원이 약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A 업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서에 주변의 말만 듣고 함부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제1 법률행위). 위 제1 법률행위는 결국 A 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A 업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A 업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투자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조달을 한다. 당해 자금조달 방식은 전환권(Refixing)이 포함된 형태의 투자유치를 한다. A 업체는 제1 법률행위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 A 업체의 어느 누구도 투자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전환권(Refixing)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 법률행위).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로 A 업체의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A업체와 甲의 입장에서는 제1 법률행위와 제2 법률행위에서 동일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한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A 업체는 제3자에게 인수되게 된다.

법률행위 계약서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적어도 적게는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적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법인임감도장은 함부로 날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관계에서 몰랐다는 부지의 항변은 법원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벤처, 중소기업이 특히 자금조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신뢰적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도 기업도 서로 투자계약서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 사례에서 만일 A 업체가 사전에 이러한 전환권(Refixing) 조항의 결과를 예견 하였더라면 좀 더 제1 법률행위의 과오를 거울 삼아 좀더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면 A 업체 또는 甲은 투자자에게 전환권(Refixing) 조항의 행사결과 투자자가 초과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반대로 콜옵션(Call Option) 등을 지정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양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례에 있어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그릇된 이해 또는 방만한 날인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거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든 기업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법률행위 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계약 위반의 분쟁 사례 유형】

1. 발행조건에 관한 위반 사례

Q: 종류주식 발행을 하였는데 등기 과정에서 보통주 등기를 한 경우

A:

등기는 회사의 의무인바, 회사는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투자계약서에 다른 책임이 발생한다.

2. 발행조건에 관한 위반 사례

Q: 주식의 발행한도를 초과 한 경우

A:

주식발행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며 등기가 되지 않는다. 통상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그 결과 발행하는 주식의 정관의 한도를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하여 정관의 발행한도를 증가하는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3. 발행조건에 관한 위반 사례

Q: 리픽싱(Refixing) 조건의 일부가 등기 되지 않은 경우

A:

전환권을 수반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리픽싱(Refixing) 조항이 등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등기의무는 회사의 의무인바 회사는 투자자 또는 이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은 제3자(구주 양수인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4. 투자금 사용용도 조항 위반 사례

Q: 투자금을 지정된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A: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사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그 용처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이 문제된다.

5. 진술과 보장에 관한 위반 사례

Q: 진술과 보장에 있어 분식이 된 재무제표가 제공된 경우

A:

투자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제공된 경우에는 투자자는 기업에게 진술과 보장 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서 상의 민사적 책임 외에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6. 투자계약서의 동의 조항 위반 사례

Q: 증자를 하면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A:

증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기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위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투자계약서의 동의 조항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 하면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A: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의 경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기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위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 위반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계약 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8.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A: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금지 사항으로 기재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 위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경우 생존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직원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9. 보고 및 자료 제출 약정을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A:

보고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를 계약을 종료할 만큼 중대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확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 위반이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과 인관관계를 입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사항에 따라 개별적 판단가능성이 있다.

10.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 약정을 위반 사례

Q: 이해관계인이 공동매도 약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인의 주식만을 처분한 경우

A:

공동매도권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첨부자료】

1. 일반적 투자계약서와 Seed 투자계약서 비교표²¹⁾

구분	일반벤처투자 RCPS	Seed 초기기업 CPS (권고안/아래 3단계)	비고
신주의 발행사항(투자조건)	○	△	(간소화)
투자의 선행조건	○	△	(간소화)
진술과 보장	○	△	(통상 15개 항목 내외) vs (간소화)(축소/4개 항목)
거래완결 전 해제	○	-	삭제
거래의 완결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간소화)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간소화)
청산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간소화)
전환권에 관한 사항	○	△	(통상 8개 항목 내외) vs (간소화)(축소/5개 항목)
상환권에 관한 사항	○	-	삭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간소화)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	(간소화)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	(간소화)
임원의 지명	○	-	삭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	(통상 10개 항목 내외) vs (간소화)(축소/5개 항목)
보고 및 자료 제출	○	△	(간소화)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삭제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	-	삭제

21) 일반벤처투자 RCPS vs Seed 초기기업 CPS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간소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	-	삭제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	△	(간소화)
투자자의 주식 처분	○	-	삭제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	(간소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권(Tag-along)	○	△	(간소화)
주식매수청구권	○	△	(통상 13개 항목 내외) vs (간소화)(축소/4개 항목)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	-	삭제
지연배상금	○	-	삭제
이해관계인의 책임	○	△	(연대책임 삭제)
본 계약의 효력	○	○	-
계약의 종료	○	-	-
계약의 내용 변경	○	○	-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	-	삭제
통지	○	-	삭제
비밀유지	○	-	삭제
세금	○	-	삭제
일부 무효	○	-	삭제
준거법 및 분쟁해결	○	○	-
특약	○	-	-

※ 위 비교 예시에서 Seed 초기기업 CPS (권고안)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Seed 투자계약서 단계별 권고안

가. 비교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신주의 발행사항(투자조건)	○	○	○
	본건 주식의 내용	○	○	○
	투자의 선행조건	○	○	○
	진술과 보장	○	○	○
	거래의 완결	○	○	○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선택)	○(선택)
	기술의 이전, 양도, 경영 및 퇴사 등 제한		○(선택)	○(선택)
	투자자의 동의권		○(선택)	○(선택)
	보고 및 자료 제출		○(선택)	○(선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선택)	○(선택)
	회계 및 업무 감사		○(선택)	○(선택)
	계약의 효력 및 내용 변경	○	○	○
	준거법 및 분쟁해결	○	○	○
	이해관계인의 책임			○
	주주간 합의			○
별지 1	의결권	○	○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권에 관한 사항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별지 2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
	주식매수청구권			○

나. 활용방안

- 권고안은 (i) 주식[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별지1)]인수계약서로서의 기본조건 및 내용 + (ii) 회사의 의무사항 + (iii)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주주간 합의사항, 별지2)를 결합한 형태임

※ 본건 주식의 내용인 별지1의 내용을 삭제할 경우 보통주인수계약서가 되며, 단계별로 보통주인수계약서도 전환우선주인수계약서와 동일한 3단계를 활용할 수 있음

- 1단계는 『(i) 주식[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별지1)]인수계약서로서의 기본조건 및 내용』만으로 구성
- 2단계는 『(i) 주식[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별지1)]인수계약서로서의 기본조건 및 내용 + (ii)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구성
- 3단계는 『(i) 주식[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별지1)]인수계약서로서의 기본조건 및 내용 + (ii) 회사의 의무사항 + (iii)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주주간 합의사항, 별지2)』로 구성
- 3단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벤처투자계약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형태이며, 세부적으로 각 항목의 내용을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는 3단계가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단순 투자만을 하고 경영관여 및 이해관계인 의무사항을 배제할 경우에는 1단계 활용 가능

3. 권고안 Sample

가.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Seed)

나. 보통주 투자계약서(Seed)

* 각 계약서 별첨 첨부

4. 법률용어의 해설

※ 일반인 입장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구분	용어	내용
1	전환우선주	-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에 몇 가지 권리(다양하게 약정)가 주식의 내용에 추가되는 주식(후술) -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주식) + 우선주
2	투자자[*]조합	- 투자자가 [*]조합인 경우 펀드(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기구)의 일 형태로 이해
3	이해관계인	- 보통 대주주 또는 핵심인력 기재
4	종류주식	- 보통주에 대비 되는 개념으로 보통주에 몇 가지 권리가 추가 부여된 주식을 통칭하여 종류주식이라 함 - 이익의 배당, 의결권의 행사, 잔여 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그 회사가 정관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의 한도 수
6	발행주식의 총수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
7	기명식	-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주주명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명부에 주주가 누구인지를 기재하는 형태의 주식 - 기명식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날인·배서해야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식이 양도
8	액면가	- 회사가 정관에 따라 정한 1주의 금액 - 주권(株券)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
9	발행가(액)/인수가액	- 회사의 실제 평가가치에 따른 1주의 금액이며 보통 액면가 × [*]배로 표현됨 - 회사는 기업가치가 높거나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 1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에 몇 배를 곱한 금액을 받고 주주(투자자)에게 주식을 부여함
10	총 인수대금	- 인수가액의 총합(1주당 인수가액 × 인수주식 수)
11	납입기일	- 인수대금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날
12	납입계좌	-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회사의 계좌
13	의결권	- 1주당 1개의 표결권을 가지면 주주총회에서 찬반 의결을 행사하는 권리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
14	발행일	- 주금을 납입한 다음날
15	배당	- 회사가 1년 결산을 하고 법률적, 회계적으로 계산된 배당가능이익이라는 것을 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
16	(이익배당)우선주	- 보통주 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것. 단 참가적 우선주여서 결과적으로 보통주주보다 더 받거나 같게 배당을 받음
17	참가적	- 우선주가 배당을 먼저 받고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8	누적적	- 전년도에 배당받지 못한 우선주 배당률을 누적하여 차년도에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9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주	- 회사가 해산을 하고 청산(재산정리)을 할 때 회사의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회사 재산에 대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말하며 청산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은 보통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를 말함. 단 채권자에 우선할 수는 없음
20	전환권	-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권리 - 전환권은 전환하면서 전환비율에 따라 1우선주당 교환되는 보통주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에 의미가 있음
21	전환비율	-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비율 - 나열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정 - 리픽싱(Refixing)이라고 함
22	유상증자	- 회사가 신규 주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자본금의 늘리는 행위를 말함
23	주식관련사채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말함
24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25	주식배당	- 주식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 - 일반적으로 주식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신규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
26	무상증자	- 신규 자금의 납입 없이 회사의 재원으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것 - 주주의 주금 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
27	합병	- 회사와 회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행위 -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
28	주식의 분할/병합	- 주식의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행위 - 주식의 병합은 주식을 합치는 행위
29	선행조건	-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
30	진술과 보장	- 회사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이 현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보장하는 행위
31	정관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준칙 -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 회사 설립 당시부터 필요하며 정관에 따라 회사가 조직 운영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
32	지분증권	- 주식 또는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권리 등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33	주권	- 주식을 유가증권화 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장한 증권 - 주권이란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34	주주명부	- 주주가 기재된 문서 -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사의 장부
35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명칭, 임원 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공적 문서
36	회생	- 회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 절차를 밟는 행위 - 회사의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7	파산	- 회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법인을 소멸하는 행위
38	해산	- 회사를 소멸하도록 사유 -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9	청산	-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행위 - 회사 등의 법인 · 조합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40	분할	- 회사를 분리하는 행위 -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
41	분할합병	-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와 합치는(합병) 행위
4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
4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
44	영업양수도	- 회사의 영업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45	우선매수권	- 타인이 가진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46	공동매도참여권	- 제3자가 주식을 매도 할 때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7	주식매수청구권	- 제3자(이해관계인)에게 주식을 매입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48	연대책임	-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